

# 뚝을 틈 없는 ‘철통보안’ 경쟁력

## 가상화폐 거래소

### ③ 보안사고 없는 ‘코인원’

모바일 앱 오픈된 규모 증가 예상  
탱글 ‘아이오타’ 국내 유일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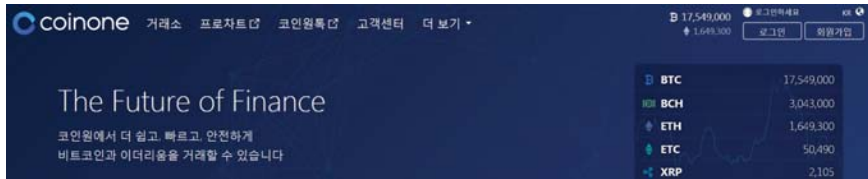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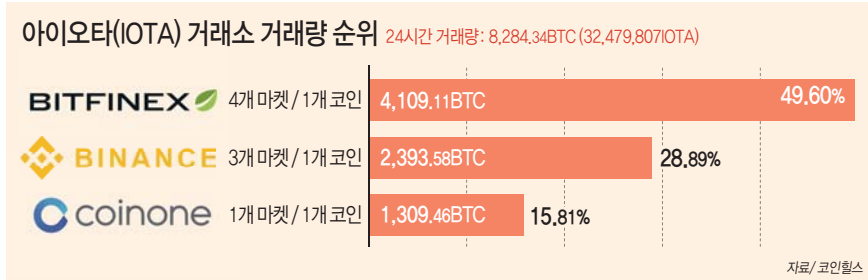
코인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보안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직 가상화폐는 물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규정이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 수준과 거래안정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 요소다.

16일 코인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거래규모는 8000억~9000억원 안팎이다. 지난해 12월 5000억~7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평균 40% 가량 늘었다.

가상화폐 정보제공 사이트인 코인월스 집계에 따르면 거래규모로는 업비트, 빗썸에 이은 국내 3위며, 세계 시장에서는 14위권이다.

모바일 앱이 오픈되면 거래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현재 모바일 앱의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오픈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코인원은 일단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빠른 거래 뿐 아니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해 거래 전 단계에서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지원받을 수



코인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5월부터 상장하는 코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명세서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가상화폐의 개요와 현황을 담고 있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퀀텀 등 6개 코인에 대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5월 이전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도 명세서를 준비 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명세서는 리서치팀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해당 가상화폐의 비즈니스, 인지도, 시장성, 기술적 검토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에는 9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

다. 이 중 아이오타(IOTA)는 국내에서는 코인원에만 상장된 상황이다.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에 특화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블록체인이 아닌 탱글(블록체인을 발전시켜 만든 새로운 구조의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코인원은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함께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인 ‘크로스(Cross)’를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금융그룹의 100% 자회사로 출발했지만 데일리금융그룹이 지난해 8월 옐로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코인원의 대주주는 사실상 옐로모바일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옐로모바일은 데일리금융그룹을 통해 코인원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靑 행정관 작성한 ‘삼성현안’ 실제로 해결된건 거의 없어

##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 ③ 대통령 독대

개별 현안, 삼성물산 합병만 성사  
500만주 처분... 공정위 압박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받아봤다. 이 참고자료에는 삼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기록됐다. 대통령이 기업 오너와 독대할 때 기업의 현황을 알려주는 이 자료는 독대에 나서는 기업에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삼성의 경우 청와대에서 직접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며 작성한 자료였다.

해당 자료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에 관한 엘리엇 사태, 지분구조 등의 정보가 담겼다. 특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이 부회장에게 언급했고 이를 추진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이 부회장의 지분을 늘려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성사된 개별 현안, 삼성물산 합병이 유일  
다양했던 삼성의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성사된 것은 삼성물산 합병이다. 2015년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합병 가부를 표결하게 됐고 삼성과 엘리엇은 각기 찬반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9.92%였던 지분을 11.61%까지 급격히 늘리며 표 확보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전문위원회 대신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서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문위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란 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재판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전 SK(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단체와 학계로 구성된 전문위는 각자 본인들 얘기만 했고 공단에서 준비한 분석 자료는 보지도 않았다”며 “참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문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냐’며 참담해 했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찬반 여부를 빨리 가려달라는 것과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던 외국인 주주들은 합병이 결정된 후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손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국민연금 전문위가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난 1심 재판에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오류투성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처음 논의된 순환출자, 격론 끝 결정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변동이 생겼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탓에 삼성그룹은 일정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구 제일모직 주식과 구 삼성물산 주식을 합친 신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산 실수를 발견, 이를 900만주로 줄였다. 이후 내부 토론을 거쳐 500만주로 반복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가 인식한 첫 신규 순환출자 사례였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해석에 따라서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될 수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공정위 소속이면서 청와대에 파견된 한 행정관은 “결국 삼성SDI가 원손에 400만주, 오른손에 500만주를 들고 있다. 이게 900만주로 합쳐졌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생각하면 400만주나 500만주만 처분해야 한다. 형식만 따져 900만주 전부를 빼앗는 것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은 공정위가 내리는 것이기에 당시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 또 ‘거래소 폐쇄’ 발언... 비트코인, 올 최저가 급락

반복되는 ‘거래소 폐쇄’ 발언에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급락했다.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59분 1731만원까지 급락했다. 올해 최고점인 지난 6월 2661만6000원 대비 34.9% 하락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에만 해도 1900만원 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정부 관계자의 경고

가 다시 한 번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부처 간 긴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세를 한다든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고에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부터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안성미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 5만명 돌파... 출시 10년 5개월만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10년 5개월여 만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장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16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옥치동(73), 김명순(70)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이 최종 승인됐다. 이들은 주택연금 5만번째 가입자로 선정됐다.

주택연금 상품에 5만번째로 가입한 옥씨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며 사망 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만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



공사는 16일 5만번째 가입자인 옥치동, 김명순 씨 부부를 부산시 문현금융로에 위치한 본사에 초청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이정환 주금공 사장, 옥치동 씨, 김명순 씨. /주금공

지 누적 가입건수는 4만9815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최초로 울릉도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나왔다. 1억3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78세 어르신은 지난해 11월 주택연금이 가입하여 매월 68만원(전후후박형)을 받게 됐다.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연령은 평균 71.9세로,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했다. 가입 후에는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았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인 127만원의 77%에 해당한다.

공사 관계자는 “2018년에도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P2P 취급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

앞으로 개인간(P2P)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P2P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2조1744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P2P 연계 대부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